복부 · 흉부 MRI 검사비 부담 줄어든다

평균 49만~75만원→16만~26만원 선으로

내일부터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1월부터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복부와 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부와 흉부 부위의 암(간암·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복부와 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와 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 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꽃무릇과 함께 찰칵 초가을 날씨를 보인 17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천연기념물 제154호)으로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활짝 핀 꽃무릇을 살펴보고 있다.

국산 · 외제차 '납 기준치 초과' 부품 다수…조사 착수

독일업체 '콘티넨탈' 위법인정…"인체무해" 주장

독일 회사 '콘티넨탈'이 공급한 국산·외제 자동차 부품 일부에 기준을 초과한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국내 차량만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부품에 허용되는 납 기준치는 0.1%이며, 유럽연합(EU)과 동일하다.

콘티넨탈은 기준치 초과 자사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적고,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장착됐기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국산 차량에도 장착돼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부품 장착 세부 차종을 조사하며 연말까지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콘티넨탈 측의 무해성 주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콘티넨탈의 부품 제작과 납품 경로를 추적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건은 지난달 독일 주간지 '빌트'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납품 계약을 한 협력사와 환경 당국에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콘티넨탈 측에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며, 콘티넨탈은 납 기준치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하기로 했다.

뉴스1

호남신문
전화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아내 탄 차 바다 빠뜨려 살해 50대 무기징역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하기는 커녕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속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 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에 징역 5년 구형…檢 "성범죄 고의"

검찰 "과거에도 강제추행 전력…강간죄 인정돼"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이러한 공포감은 일반인은 물론 조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가 2012년 12월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과거 전력처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깊이 사죄한다"며 "잘못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금주 치료도 반드시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며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조씨의 행동만으로 강간의사를 가지고 따라간건지, 아니면 술 한잔 더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건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